

Bright Future
through technology

청렴문화 확산

- R&D 부정사례 중심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목 차

01 왜! 청렴인가?

02 정부재정 누수 현황

03 R&D 정부지원금 누수 사례

0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05 연구부정 신고 창구

01. 왜! 청렴인가?

그리스 디폴트 원인(?)



나태한 국민, 과도한 복지(?)

- 근로시간 유럽국가 중 유일 2000시간 이상
 - OECD국가 중 3위(한국 2위)
- 평균 은퇴 연령 62.4세(독일은 62.1세)
-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21%(독일은 28%)

(KBS1 : 2015.6.30)



324 : 16,974 (?)

- 개인수영장 (한해 500유로 세금)
 - 이를 신고한 자는 16,974명 중 324명
- 아테네 인근 지역 의사 소득 연360만원(?)
 - 영수증 떼어주는 의사가 한명도 없었음

(KBS : 2015.6.30)

그리스 디폴트 원인(?)



원인은 탈세

- 공공부문 전반에 파켈라키(Fakelaki, 촌지)가 만연
- 정치권에서는 루스페티(정치적 특혜) 만연
- 탈세와 착복이 난무하는 지하경제 양성
 - 탈세액은 2000~3000억 유로
 -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5%

(조선비즈 : 201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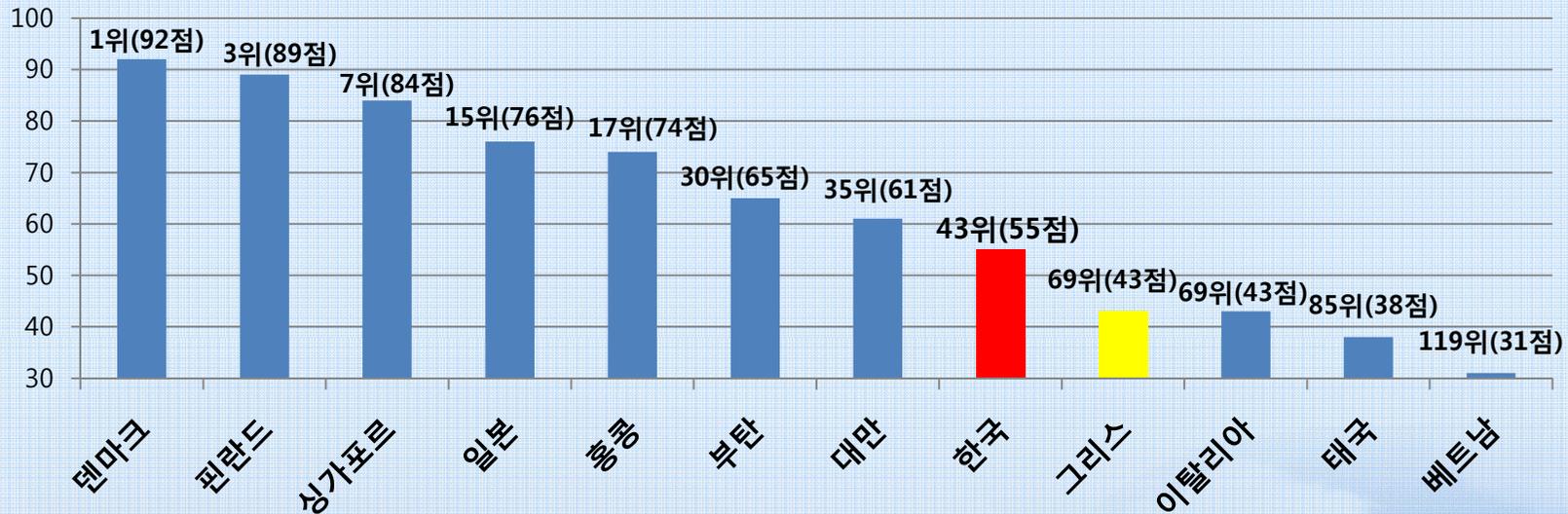
그리고 부정부패

- 2009년 한해 동안 9억 유로의 뇌물
- 그리스 국내 총생산 8% 200억 유로(24조원)
 - 탈세와 부패로 사라져(美, 브루킹스 연구소)
- '14년 부패인식지수 43점(69위, 국제투명성 기구)

(KBS1 : 2015.6.30)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2014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국제투명성 기구(TI) 발표]



'14년 부패인식지수 55점(OECD 회원국 중 27위)

2008년 56점 최고점 이후 6년 평균 49점대 계류

부패인식지수 1단위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 2.64% 증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 0.2% 상승 (즉, 자본 유출) (한국개발연구원, 2009)

부패인식지수 10점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가량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KBS1, 2015.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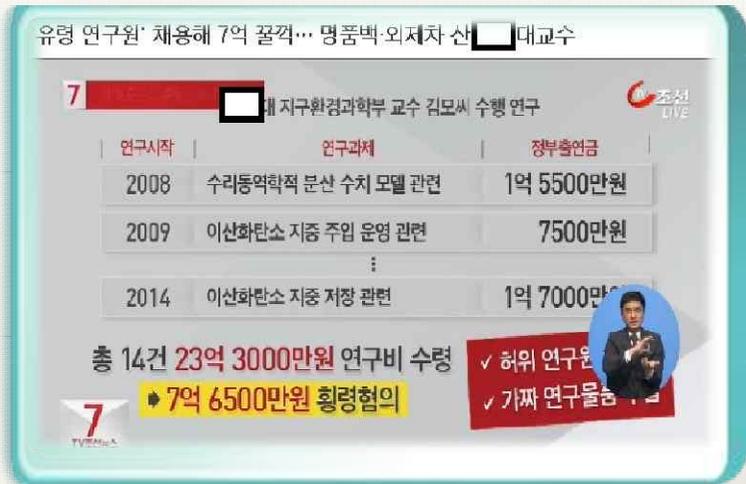
02. 정부재정 누수 현황

정부 돈은 눈 먼 돈(?)



유령 업체 앞세워 연구비 1억 횡령한 S/W개발 업체

정부 지원비 2억원 중 1억원을 지인 명의의 유령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처럼 꾸며 횡령 (KBS1 : 2014.9.25)



7억 6,500만원의 연구비 빼돌린 S대 부교수

국가 연구 개발 과제 수행 연구비를 연구원 허위 등재 등으로 빼돌려 명품백,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 (TV 조선 : 2015. 4.6)

정부 돈은 눈 먼 돈(?)



부정 사용액에 최고 100%까지 과징금 부과 (산업부)

다시 돌려놓은 유용액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 사용액 원금 환수 및 과징금 까지 부과 (KBS1 : 2014.9.25)



연구비 3회 부정 사용시 10년 참여 제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 사용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 부과 3회 적발시 10년 동안 참여 제한 (YTN : 2015. 4.7)

정부재정의 건전성 제고 필요

복지 예산 등 의무 지출의 증대, 인구 고령화 등
재정 압박 요인 증가에 따라
재정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 필요 증가

공공 재정 누수 관행 개선은 공공 재정 효율 향상의 필수 조건
공공 부문에서의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 예방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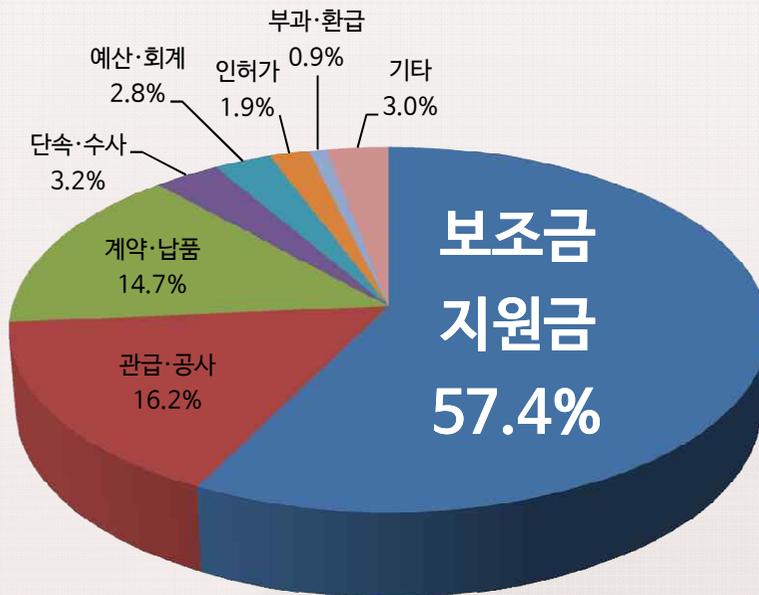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과 더불어
미래 지출을 위한 건전 재정 유지 강조 ('14.2.25)

민간 부문의 정부재정 누수

- 허위·과다 계상 청구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 연구 개발비 편취
- 품질 기준 미달 제품 납품

다양한 부정 행위 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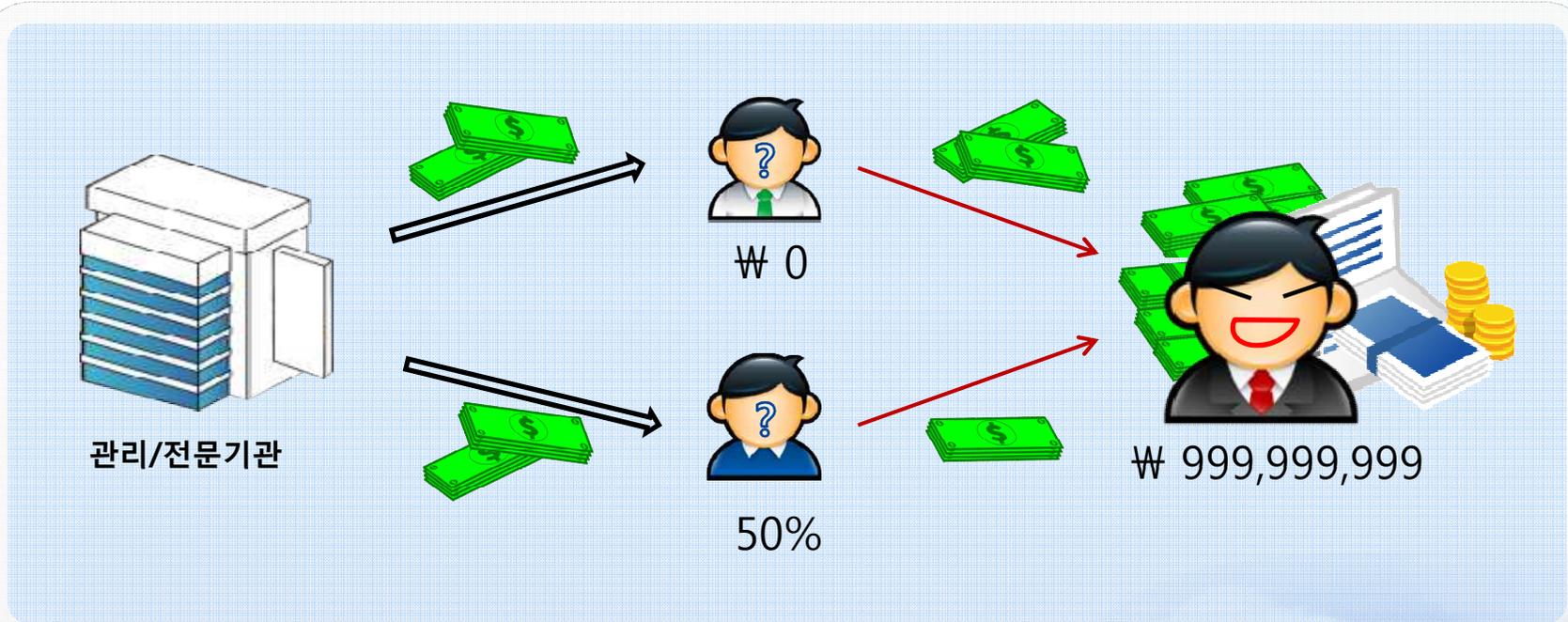


- 권익위가 '11년 ~ '14년 9월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의 57.4%가 보조금 관련 사건
 - 환수 대상액만 539억 8천만원
허위·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 손실 규모 막대
 -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 개발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 출처 : 국민권익위, '14.11.4



03. R&D 정부지원금 누수 사례

1. 어떻게 새는가? – 인건비 편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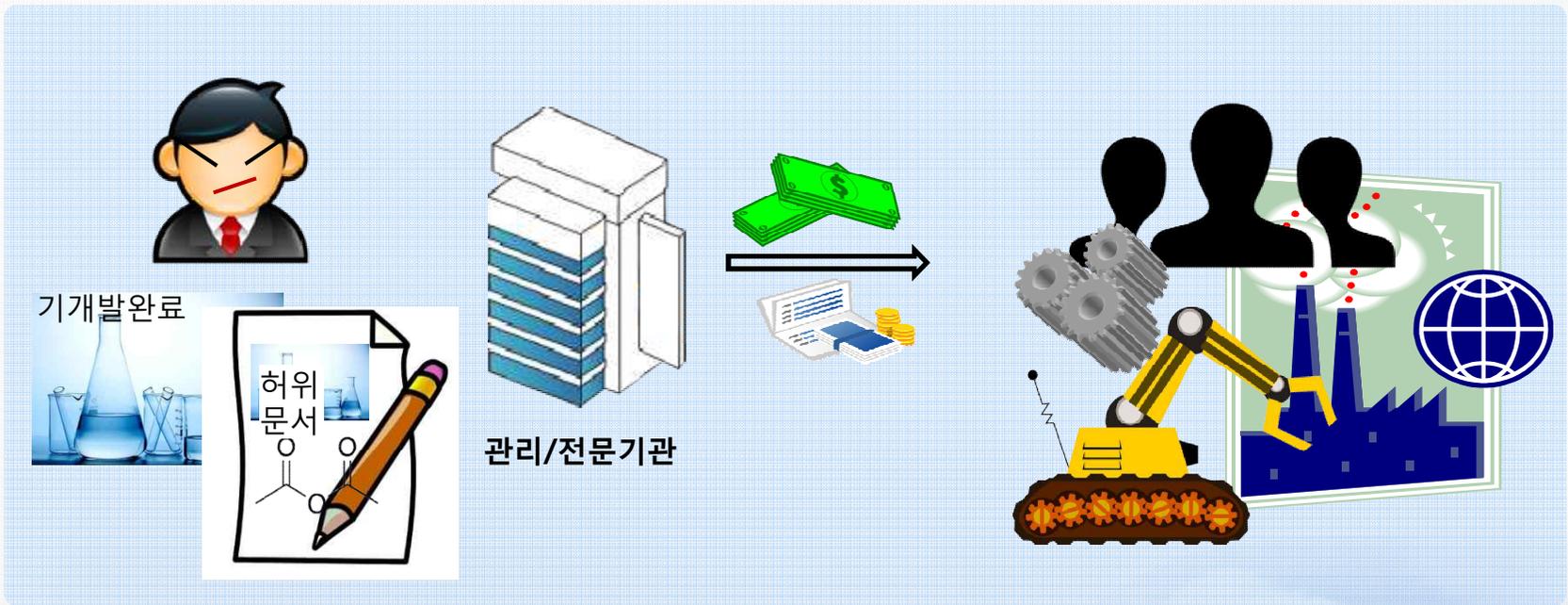
사 례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편취.

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수수하여 연구비 유용.

현장 실사 시 행정 인력을 사업 계획서 상 연구 인력으로 사칭하였다가 신분증 검사로 들통.

2.어떻게 새는가? – 허위 사업계획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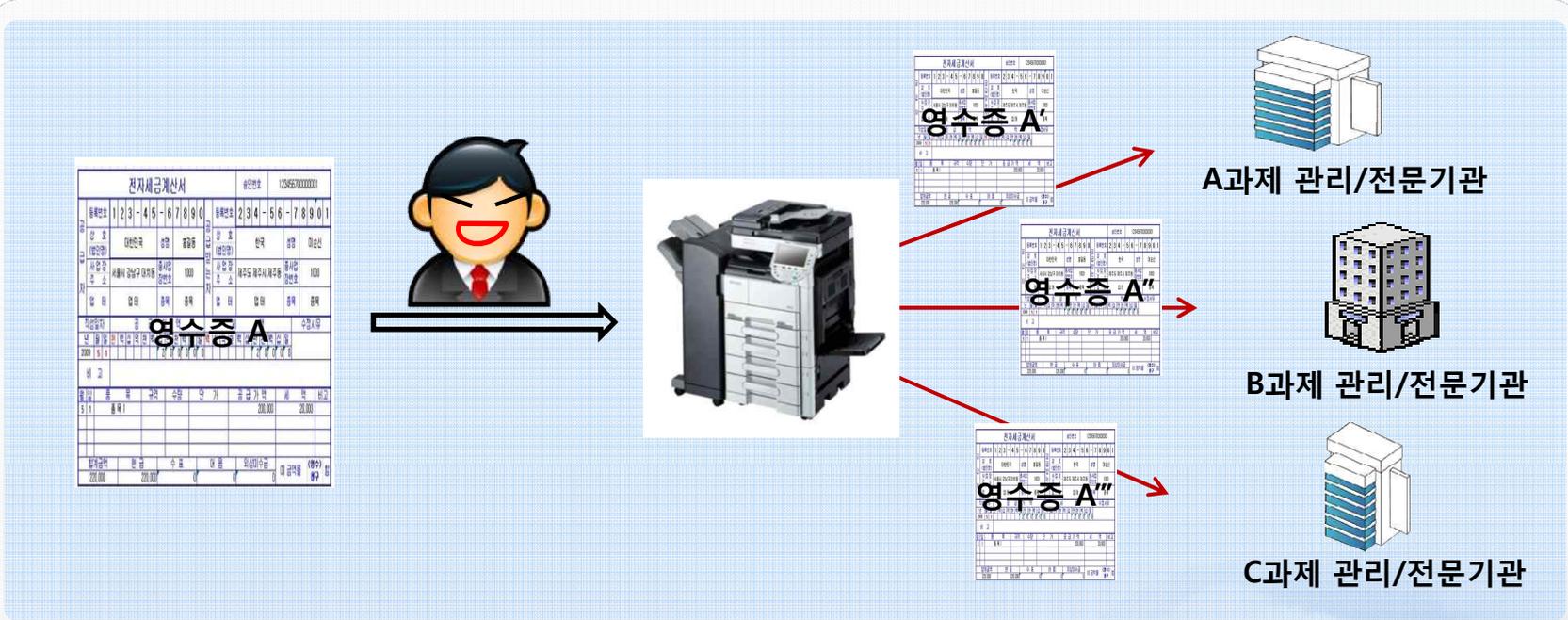


사 례

이미 개발해 놓은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정부 출연금 수령.

생산용 자재 및 부품 구매, 행정 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 후 연구 개발용 자재를 산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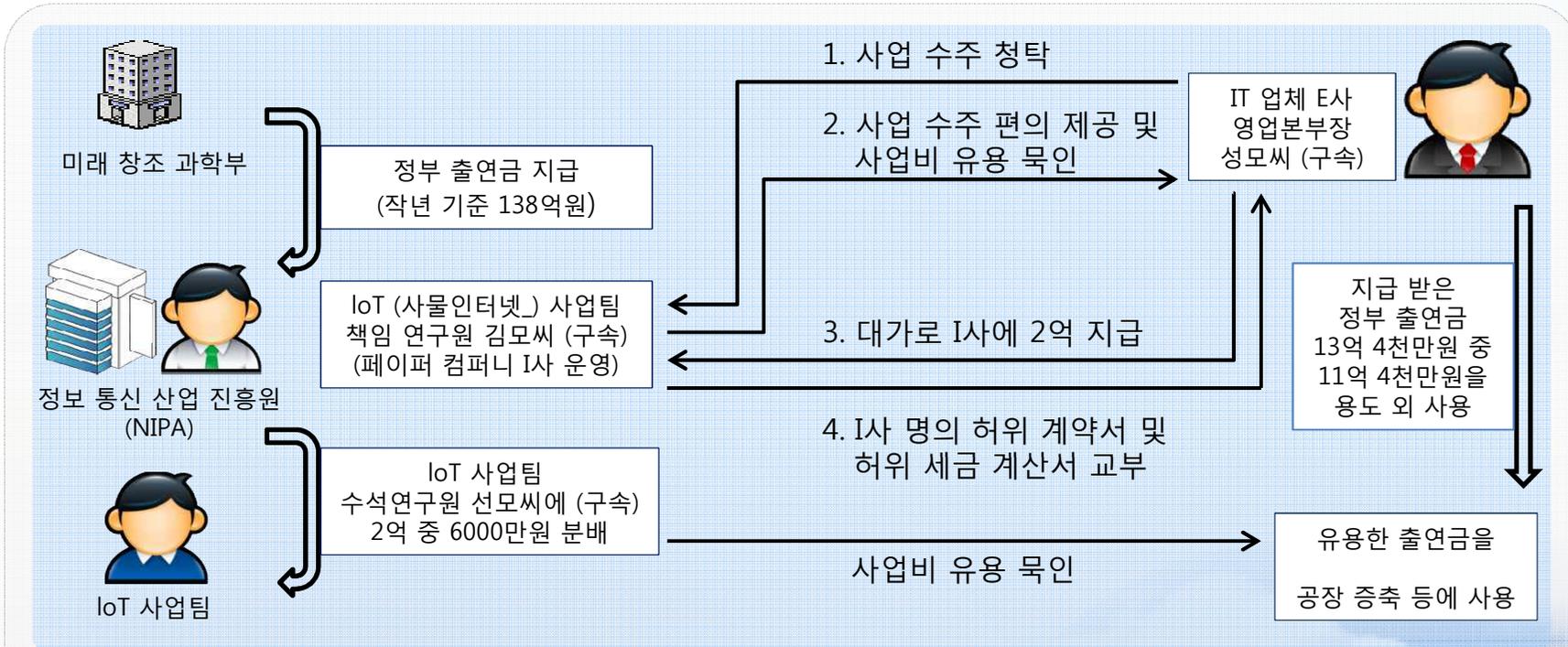
3. 어떻게 새는가? - 집행 증빙자료 조작



사례

한 건의 연구비 집행자료를 다른 과제의 집행증빙용으로 중복 사용.
 연구비 카드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과제 증빙 스탬프'까지 찍어 증빙자료 조작하고,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타부처 과제의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횡령.
 다부처 중복수행 과제의 연구비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힘.

5. 어떻게 새는가? – 부정청탁, 뇌물 수수



사 례

공공 기관 소속 연구원이 기업체와 모의하여 정부 출연금 횡령. 특히,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이용. 현장 실사 담당 직원과도 모의하여 해당 직원은 정부 출연금 유용 행위를 묵인해 주고, 횡령한 돈을 외제차, 명품 구매, 해외 골프 여행 등으로 탕진.

0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참여 제한 최대 5년 및 정부 출연금 전액 환수 가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재 부가금 5배 부과

미납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1조, 12.12.11 개정)

제재 및 환수 등 행정 처분 외 형사 고발 가능

☞ 사기, 업무 방해, 횡령, 배임 등 형사 고발

예1. 사업 신청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사기, 업무 방해

예2. 정부 지원금 목적 외 사용 ☞ 횡령 (사업비), 배임 (사무 처리)

공공재정 허위 부정 청구 방지법



공공 재정 허위 부정 청구 방지법 제정 예정

(국민권익위 공고 제 2014-33호)

정부 자금의 허위 부정 청구, 사용 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법적 성격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 부정 청구 등 조사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 공공 재정 목적 외 사용 등에 있어 그 과실 없음을 수익자가 입증 (입증 책임 전환) 하고, 2~5배까지 손해 배상액 결정
- **납부 의무 승계** : 부패 수익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은닉하는 행위의 방지 위해 상속 양수인으로부터 부정 이익 환수
- **부정 청구 등 조사** : 관련자 출석, 사업장 출입 및 조사, 관련 관서를 통한 과제 정보 수집 가능

05. 연구부정 신고 창구

기정원의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

'14년 감사팀 신설

기관 내/외부 부조리 개선 조직 본격 가동

대내외 감사, 상시 신고채널 강화

내/외부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 등 조사 처리
레드휘슬(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행위자 처벌규정 강화

부정한 평가개입, 평가결과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자의적인 징계차단 위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14년 권익위 실시 청렴도 측정 결과 등급 상승

내부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1등급 상승

익명(무기명)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이러한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정부지원금 횡령 행위, 연구보고서 허위 작성 행위,
 정부지원금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기타 정부지원금 관련 불법 행위 등



신고 방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홈페이지 하단
 레드휘슬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 클릭



신고서 작성

※ PC, 스마트폰 어떤 기기를 이용하든 사용자 IP를 남기지 않아 익명성이 절대 보장됨

가장 중요한 것

연구비 집행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R&D 사업 효율성 저하의
주요 요인

성실한 연구자까지
비리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국가R&D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

국가 경제와 과학 기술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연구자의 자부심과 양심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제고

감사합니다